

정부 PSI '정식참여' 거부 배경은

한미공조 보다 '전쟁위험 회피' 선택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참여'를 유보키로 한 것은 결국 핵실험 이후에도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가장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3일 PSI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지만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남북해운협약의 등 국내법과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혀 사실상 정식 참여는 거부했다.

◇한반도 '특수상황'에 무게 둔 결정=정부가 강조한 '특수한 상황'은 남북이 기술적으로 휴전중인 상태에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이뤄지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정부는 PSI에 정식 참여하더라도 개별 활동에 대한 참여국의 재량권이 보장되는 점을 감안, 정식참여를 하되 한반도 주변에서의 활동은 하지 않는 방안도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로 이란, 북한 등을 타깃으로 삼는 PSI에 한국이 정식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정부는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인국(왼쪽)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과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북한과 한반도의 해리를 나누고 있는 입장에서 PSI에 정식참여를 하면서도 한반도 주변에서 이뤄지는 훈련 및 실제 상황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6자회담 복귀 결정·국내 정치권 반발이 '결정적'=정부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10월9일 이후 1개월여 고민 끝에 참여유보를 결정할 때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국내 정치권의 반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중 3자 회동에서 6자회담 재개가 결정됨에 따라 북핵 국면이 대북 제재 일변도에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쪽으로 전환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악의적 무시'와 '압박'으로 대표되는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의회의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된 점도 일부 고려됐을 개연성이 있다. ◇미국 불만 우려도 제기=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6자회담 재개 국면에서의 '고육지책'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부는 북핵문제와 관련, 한미공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때문에 미측의 반응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가 정식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PSI의 목적과 원칙을 공식 지지하기로 한 것도 우리의 특수상황에 대해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측면이 강했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100% 수긍하고 이해하는 입장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김치파동, 그후 1년



이종대 경제부 차장

최근 김치의 주재료인 무·배추의 산지시장이 아수성이다. 산지가격이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하는 바람에 올 밭농사를 망쳤다든 농민들의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농민부는 부랴부랴 가격의 보상비를 들여 전국 김장용 무와 배추의 8.2%에 달하는 2천400ha를 산지 폐기기로 했다. 전남지역은 전국의 32%가 넘는 790ha를 갈아엎을 수밖에 없게 됐다. 여름내 땀흘려 가꾼 자식같은 농작물이 밭에서 폐기되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농심이 아오죽 하겠는가.

김장재료를 갈아엎게 되기까지는 물론 과잉공급이 원인이지만 농민들은 내수 격감을 더 근본적 원인으로 꼽고 있다. 왜 수요가 줄었나. 꼭 1년 전 전국을 휩쓴 기생충알 '김치파동' 때문이다.

김치파동은 식품안전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빼어난 자성의 목숨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러나 그 여파는 만만치 않다. 안방은 물론 해외시장까지 중국산 김치에 내주는 계기가 됐고 이후 국산 김치산업은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추세다.

실제로 김치수출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든 반면 수입은 50% 가까이 폭증했다. 광주 모 김치제조업체 대표는 "김치파동에다 중국산 김치가 판치는 바람에 매출이 20% 이하로 뚝 떨어졌고, 수출은 손을 댔다"면서 당분간 재기도 힘들다고 걱정했다.

국내 김치산업의 위기는 농민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시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재료인 무·배추 사용량이 줄어들면 마늘·고추·파 등 양념 사용량도 덩달아 감소해 농가소득에 치명타를 안길 것은 불문가지다.

우리 식탁도 중국산에 휘둘릴 태세다. 이미 병원·학교 등 대형급식소를 넘어 대중식당에까지 중국산 김치가 판치고 있으니, 상황은 심각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오는 16일부터 광주에서 김치 축제가 열린다. 김치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김치담그기' 등 이벤트와 김치를 주제로 한 마당극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지난해에 이어 김치산업 발전을 모색하자는 화살마당도 준비돼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탁상공론에만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차별화된 브랜드와 캐릭터를 이용한 적극적인 마케팅, 대형 김치공장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추진 등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작업이 없다. 무엇보다도 들어오는 중국산 김치에 대한 엄격한 반입검사와 대중적 김치 원산지 표시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 올 축제는 남도김치를 살리는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치가 살아야 농민이 건강하고, 우리 식탁이 건강할 게 아닌가. /jtee@kwangju.co.kr

주택 첫 구입 인구 2008년 '최대'

(만 35~39세)

■인구변화 따른 주택시장 예측

2012년부터 대학입시 인구 감소

결혼 후에 중소형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연령대인 만 35~39세의 인구가 2008년에 최대 수준에 도달한 뒤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입 수험생 연령인 만 18세는 2012년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돌아서고 군입대 연령의 절대 다수인 만 20세는 2014년부터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앞으로 연령대별로 인구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주택시장과 대학입시 등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 주택 구입연령 35~39세 2008년 최대=결혼 후 일정기간의 저축기간을 거쳐 소형이나 중형 주택을 매입하는



2010년 434만5천800명으로 내리막 길을 걷는다.

◇대학 입시 인구 2012년부터 줄어=대학 입시를 치르는 연령인 만 18세의 인구는 2012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령 인구는 1978년 93만70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여 올해 60만3천800명까지 줄어들었다. 이후 2020년 49만2천900명, 2025년 44만5천800명, 2030년 42만500명 등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군입대 연령 2014년부터 급격 감소=병무청 관계자는 군 입대자 가운데 만 20세가 80%, 만 21세가 20%를 각각 차지한다고 밝혔다.

만 20세 남자는 1991년 47만6천500명으로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가 줄어들기 시작해 2006년 32만7천500명, 2007년 31만8천800명에 이어 2008년에는 31만7천200명까지 감소한다.

론스타 경영진 '최후통첩' 불응

검찰, 이번 주 중 체포영장 청구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죄해 소액 주주들에게 22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외교통상부와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번 주 중 이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6번째로 소환 통보했으나 론스타 측이 어젯밤 톰슨 이사 명의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사모펀드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고 증거법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 상 허용된 법적 절차에 따라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의 신병을 인도받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쇼트 부회장이 한 경제지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최근까지 6회에 걸쳐 대리인을 통해 소환을 통보했고 이에 전부 불응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론스타 경영진의 체포영장을 '기소 위한 범죄인 인도청구용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각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법무부·외교통상부 협의 과정을 거치며 범죄인 인도청구에 체포영장이 필요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론스타 경영진과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공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영장도 이번 주에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낮게 설정해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이강원 전 행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등 2명의 사전구속영장도 급주에 청구키로 했다. /연합뉴스

LG JILLIN

상설할인마트 확장이전

가을·겨울 상품 다양입하

MAESTRO, DAKS, TOMMY HILF, TNGT, LAFORET, DAKS GOLF

상설할인마트 서당점
110000511-0249

제주도 웰빙 패키지 여행

₩149,000~

광주-제주 왕복항공 2박 3일 정기관광 숙박 식사(1인당)모임
제주도 2명 이상 출발보장

11월 20일, 21일, 27일, 28일, 12월 11일, 12일

11월 25일, 12월 3일, 10일, 17일, 24일, 31일

1568-6660 / 02-223-8903